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석

“학폭 은폐 정답 아니다”

교육위, 도내 시군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학폭 해결 주문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편성 살펴보기·지속 점검 등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8일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도교육청과 학교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시·군교육지원청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하려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 등은 은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솔직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마을학교(방과후학교)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뒤,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달라고 전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군산 A중학교 성폭력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정읍 B중학교에서 또 다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시군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학교폭력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시, 대책을 마련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또 이러한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진형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편성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추가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안전한 교육자치가 이뤄지려면 시군에서 발생하는 교육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현안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고 김범수 대위 15주기 추모 18일 전주시 임실군 육군35사단에서 고 김범수 대위 15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신병교육대대 장병들이 헌화하는 모습. (사진=35사단 제공)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평화당 조배숙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 대표발의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에 일반용 요금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추진된다.
조배숙 의원(민주당·전북 익산)은 18일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보다 크게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 국전력은 약관을 통해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한 전기료 인하(5.9%)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항인데다가 인하폭도 불충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

과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요금 대비 20% 가량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 고착화된 불경기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기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만 늘어간다는 것이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만이라도 뚫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5·18 망언, 헌법정신 부정”

靑 수석 보좌관 회의서
“정치권서 폭동·북한군
남파 주장으로 왜곡·편해
민주주의 파괴행동에 불허
국민, 색깔론 등 정치 이익추구
행태 단호히 거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과 관련해 “우리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왜곡·편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보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7년부터 5월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

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곧 3·1운동 100주년이다.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매출액 큰 전문점 준 대규모점포에 포함

김광수 의원, ‘준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당)은 18일,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하도록 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비롯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장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들이 등장하고 있어 지역중소유통



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 월 2회의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다이소 등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점포임에도 전문점 등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시킴으로써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규모점포와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마트와 SSM 등의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매장 규모의 증대와 판매 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와 비슷한 이케아·다이소 같은 점포들은 규제대상의 울타리 밖에 있어 유통산업 규제의 형평성 문제 및 지역상권 위축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